

## 2015 노동시장: 일자리 전망 호전에 필요한 일

허재준\*

2014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55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상으로는 보편 역대 최고의 노동시장 성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체감 일자리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니고, 호주머니 사정이나 가계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 또한 높아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경기변동주기로 보아 상승국면에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노동시장 사정이 더 좋아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올해의 취업자 수 증가는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폭이 어느 때보다도 컸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분명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지속되기 힘들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탈출구였던 중국시장은 한편으로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한국 중간재 수요를 줄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훌쩍 높아진 경쟁력으로 한국기업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을 앞지르는 샤오미가 그 대표적인 표본이다. 몸놀림이 가벼운 기업조직을 갖추고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샤오미를 삼성이 다시 따돌릴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한국이 영거주춤하는 사이에 한국기업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중국기업이 하고 있다. 중국기업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다. 모바일 천지를 진동시키며 소비가 국경을 넘나드는데 한국은 결제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아 물건 파는 게 불편하다. 불편한 것 참지 못하는 모바일 세대에게는 치명적인 영업결함이다. 그 틈을 비집고 중국 결제 시스템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 결함은 언제 치유될지 알 수 없다.

유럽과 일본은 아직 만성화된 위기 터널 속에 있다. 출구의 빛을 보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이웃나라 일본은 본격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수출하느라 정신이 없다.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유럽과 올해 목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국도 그러한 경주에 가담했다. 멀리서 미국은 한바탕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 진앙지가 될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시장불안은 다시 한 번 존재감을 과시할 태세다. 그런데 퇴마사는 보이지 않는다. 금융통화정책을 책임진 한국은행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대를 만나 아직도 상대파악을 못한 채 익숙하지 못한 싸움을 벌이고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hurjj@kli.re.kr).

있는 게 역력해 보인다.

누군가의 빛은 누군가에게는 채권이고 재산이다. 그런데 빛진 가계만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을 준 은행도 힘들다고 한다. 돈 빌려간 사람들이 꼬박꼬박 이자 잘 내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한다. 자금은 있지만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기업가정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이 금융기관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일하다 나온 사람으로 이런 일에 전문성을 보이는 인력이나 활동무대가 보이지 않는다. 채용시장에서 어떤 기업보다도 우수한 인적자원을 모셔가는 것이 은행인데도 말이다. 사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은행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을 시나브로 상실해 왔고, 그것이 은행사정을 어렵게 해 온 본질임을 당사자인 은행들이나 금융정책당국은 인식하고 있을까? 알고는 있는데 속수무책인걸까? 속수무책이라면 그 손을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유가하락은 그 자체로는 나쁜 일이 아니다. 열심히 생산한 부가가치 중 석유 값으로 지출하던 몫 가운데 가격 하락분만큼의 떡고물은 국내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적 불황과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의 동반지표라면 이 역시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황이어서 어려웠는데 유가라도 하락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한다면 모를까.

위기라는 상황진단이 회자되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말만 듣다가 겪은 쓰라린 기억이 있고, 위기인 줄을 알면 방도를 세울 줄을 알기 때문이다. 장안의 내로라하는 현자들이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만으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조조정인가?

문제가 구조적이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하긴 하다. 그런데 무엇을 바꿀 것인가? 부실기업을 정리해야 하는가? 그건 시장에서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관료들이 소극적·수동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감사제도를 바꿔야 하는가? 관료조직을 일신해야 하는가? 어떤 잘못된 유인구조를 작동시킨 제도를 찾아 교정을 해야 하는가? 임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도 안 되고, 성장잠재력 확충도 한가로운 처방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투자 진작이다.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래야 소비도 따라올 여지가 생긴다. 내수 진작이라는 모호한 말로 초점을 흐릴 일이 아니다. 투자를 곧바로 겨냥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더러 투자 요청을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해도 투자가 그리 늘지도 않을 뿐더러 국내에 들어오는 투자보다 나가는 투자가 더 많다. 사실 지금까지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나 대기업이 지금까지처럼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상실한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투자에 대해 기대를 걸 만한 곳은 명확하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활성화뿐

이다. 기술진보는 하루가 멀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마법의 양탄자에 올라탈 세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생 수를 줄이고 가계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릴 해법도 있다면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다.

자금력 없는 창업기업이 우수한 사람에게 주식옵션을 주며 같이 일하고 싶다는데 주식옵션을 주는 것은 왜 그리 어려운가? 내 회사 주식이 얼마만한 가치를 갖고 있고 얼마나 가치가 증가할지 모르는 종업원이 어떻게 종업원지주제나 주식옵션에 적극적으로 있을까? 주식옵션이 주는 비전도 없이 어떻게 유능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남아 있을 것이며 유능한 인적자원 없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겠는가? 가치도 모르고 환금성도 없는 회사주식에 종업원이 관심을 보일 수 있겠는가? 기술출자가 안 되는 창업규제 환경에서 도대체 기술금융이 가능할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기술금융을 독려하는 금융정책의 수장기관에는 현장을 누벼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 번 실패를 항구적 실패로 만드는 연대보증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분식회계 때문이라면 영터리 감사에 손해 이상의 책임을 묻는 징벌적 배상제도 없이 어떻게 감사와 회사의 담합을 막을 수 있을까?

벤처창업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 벤처에 인재가 물리는 것을 막는 모든 보상규제, 벤처에 금융이 지원되지 않게 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탁상대출관행과 탁상금융감독, 이런 것들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집중적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아볼 일이다. 규제혁파도 그것을 화두로 하고, 금융구조조정도 그것을 화두로 삼아, 일단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이 모여 창업하기에 편리한 세상이 될 만큼은 개혁해 볼 일이다. 금융기관의 인재들로 하여금 창업자를 찾아 국내외 현장을 누비게 하고, 창업펀드가 벤처기업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게 할 일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와 그 다음다음 해에도 취업자 수 전망치는 한결 낙관적일 수 있을 것이다. 체감지수는 그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KLI**

